



미국 이민자와 출생자의 민영건강보험 수급 현황

정인영 연구원

미국의 민영건강보험시장을 대상으로 한 Zallman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자들에 비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더 적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근로연령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의료 이용 빈도가 낮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임.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정책은 보험계리적으로 바람직한(Actuarially Desirable) 이민자의 수를 축소시켜 건강보험프로그램의 리스크 풀(Risk Pool)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민영건강보험시장을 대상으로 한 Zallman et al.(2018)¹⁾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자들에 비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더 적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²⁾

- 2014년 기준 이민자들과 미국 출생자들의 민영건강보험 납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중은 각각 72.2%와 104%이며, 특히 이민자 중 미등록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의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중은 55%에 불과함
- 이민자들은 1인당 건강보험을 통해 받은 의료혜택에 비해 보험료를 연간 1,123달러 더 지불한 반면, 미국 출생자는 납입 보험료에 비해 연간 163달러의 의료혜택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보험료는 이민자(4,033달러)와 미국 출생자(4,070달러)가 유사한 수준이나, 1인당 보험금에 있어서는 이민자(2,911달러)와 미국 출생자(4,233달러)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 즉, 전체 인구 중 14.6%에 해당하는 이민자가 85.4%의 미국 출생자들의 민영건강보험료를 보조(Subsidy)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1) Leah Zallman, Steffie Woolhandler, Sharon Touw, David U. Himmelstein, and Karen E. Finnegan(2018. 10. 1), "Immigrants Pay More In Private Insurance Premiums Than They Receive In Benefits", *Health Affairs*, Vol. 37, No. 10

2)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지출패널조사(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의 약 52%, 미국 출생자의 59%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표 1〉 이민자와 미국 출생자 간 민영건강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현황(2014년 기준)

(단위: 백만 명, 십억 달러, %)

구분	가입자		보험료 납부액		보험금		보험금/보험료
	인원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이민자	46.2	14.6	88.7	12.6	64.0	9.1	72.2
미등록이민자	11.8	3.7	17.1	2.4	9.4	1.3	55.0
미국 출생자	269.6	85.4	616.0	87.4	640.7	90.9	104.0

자료: Zallman et al.(2018)

■ 이는 이민자들이 미국 출생자들에 비해 가입집단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근로연령대³⁾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의료 이용 빈도가 낮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임

- 이민자의 경우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더라도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미국 출생자에 비해 의료혜택 대비 납입보험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⁴⁾
- 이민자의 의료 접근성, 환자의 안전, 불필요한 검사 및 입원방지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통역관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정책은 보험계리적으로 바람직한(Actuarially Desirable) 이민자의 수를 축소시켜 건강보험프로그램의 리스크 풀(Risk Pool)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행정부는 미등록이민자의 과도한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이 미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⁵⁾을 기초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며 반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음⁶⁾
 - 2018년 9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신청 시 공공의료복지혜택 이용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신이민정책안을 발표하였으며⁷⁾, 그 여파로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향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공공의료복지혜택을 포기하고 무보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⁸⁾
- 그러나 오히려 이민자 통제 정책으로 의료이용량이 적은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민영 건강보험 리스크 풀(Risk Pool)의 고위험자 비중이 상승하여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kiri**

3) 근로연령층끼리 비교 시 이민자가 미국출생자에 비해 의료혜택 대비 납입보험료가 연간 1,640달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미국에 10년 미만 거주한 이민자의 경우 연간 1,825달러, 1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는 연간 981달러의 보험료를 받는 의료혜택보다 더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52%가 이민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약 67%는 미등록이민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함(Flavin L, Zallman L, McCormick D, and Wesley Boyd J(2018. 8. 8), “Medical Expenditures on and by Immigrant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6) HUFFPOST(2016. 5. 26), “Trump on Immigrants and Health Care Costs: Just Plain Wrong”
 7)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65세 이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 Part D) 등 공공복지혜택을 이민신청 전 36개월 간 연방빈곤선의 15%를 초과하여 이용 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이 기각 당할 수 있음(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2018. 9. 21),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8) Krista M. Perreira, Hirokazu Yoshikawa, Jonathan Oberlander(2018. 9. 6), “A New Threat to Immigrants’ Health — The Public-Charge Rul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